

초격차 기술연구 시설·장비에 1910억 투입

산업부, 30개 과제 1차 공고
과제당 5년간 최대 100억 지원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

비용 부담이 커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구축에 올해 정부 지원금 1910억원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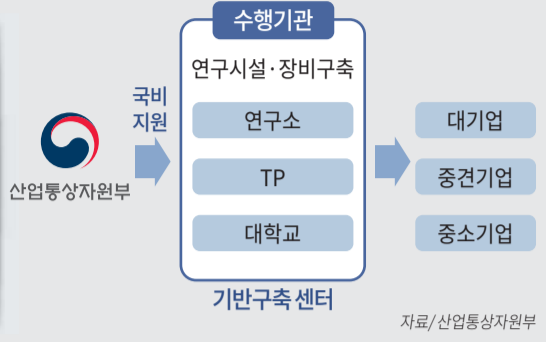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총 19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차례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4일 30개 과제를 공고

한다. 1차 공고에는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 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

축’ 등이 있다. 이밖에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홀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고강도·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수출 기업에 법률컨설팅 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 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 중소·중견기업에 보증한도 우대 등 9350억 지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신설 하나·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수출 신용보증 등 지원한도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은행권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자금 이자경감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지난달 29일 하나·우리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보가 5대

시중은행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935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해 지원한다.

무보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 등의 지원 한도와 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보험·보증료 할인을 지원한다.

은행은 보험·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700억원 상당 기금을 출연하고, 대

출 금리와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중 신한·국민·농협 등 시중 은행들과 협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진욱 무협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은 “지속되는 3고 현상으로 대외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가뭇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무보

근로복지공단 휠체어컬링선수권 참가자 수리·안전 점검 센터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재활공학연구소가 지난 2일 강릉컬링센터에서 개막한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참가자 휠체어 정비 및 수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2일~10일까지 열리는 4인조 혼성경기에 12개국 100명의 선수가, 10일~16일까지 2인조 혼성 경기로 진행되는 휠체어믹스더블컬링시합에는 2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재활공학연구소는 휠체어의 신규 개발과 성능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COLAS)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 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수리 센터를 소속 산재병원에서 7개소 운영 중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4인조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산재 장애인으로 알려져 의미가 크다.

대회 기간 중 재활공학연구소는 각국 참가자들의 휠체어 브레이크 정비, 공기압 체크 등 경기용 휠체어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강릉컬링대회장에 ‘수리 및 안전 점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휠체어컬링.

/근로복지공단

화학물질 운송 누출사고 대응훈련 지원

환경부, ‘도로 화학사고’ 훈련장 “방재·확산 차단 훈련 가능할 것”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원내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최근 완공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재와 확산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과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

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도입하여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보유한 특허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은 3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6억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0년(2014~2023)간 발생한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총 166건으로 매년 평균 17건씩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안전원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하역시설을 구현한 훈련장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 2021년 415명에서 2023년 768명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훈련장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다 견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 기후위기 해결 등 총추적 역할 수행”

환경부 차관 ‘유엔환경총회’ 참석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해 한국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녹색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29일~3월1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및 아니코 리이스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차례로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올해 11월,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내년 6월, 장소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

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성안(안건 작성)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뜻한다. 연내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을 위해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을 이루고(1차), 프랑스(2차), 케냐(3차), 캐나다(4차) 등이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에 한 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이다.

이번 6차 총회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관을 비롯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